

# 광주시 관급자재 구매 '특혜 의혹'

## 홍인화 시의원 "특정업체와 수차례 수의 계약" 주장

광주시가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여러 건 수의계약을 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인화 의원(민주·북구 4)은 15일 광주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 공사 등과 관련해 관급

자재를 단 몇 개 업체를 통해서만 수의 계약을 통해 구매했다"라며 "광주시와 특정업체 간의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광주시는 K엔지니어링으로부터 올 들어 지난 9월20일까지 17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2억6200여만원의 관급자재를 구매했고, S산업으로부터 올 들어 지난 4월16일까지

8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1억9600여만원의 관급자재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동일현장에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금하고 있는데도 영산강 7공구 자전거도로 바다다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청에 의뢰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에 따라 전체 물량을 (일괄) 발주하면 10%가량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분할 발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교통안전시설물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광주에 K엔지니어링과 S산업만 등록돼 있어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이 불가피했고, 영산강 7공구 자전거도로 바다다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청에 의뢰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석면폐기물 관리 부실"

### 정병문 시의원 지적

광주지역 내 석면슬레이트 건물이 1000여체에 달하는 등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광주시의 석면폐기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병문 의원(민주·비례)은 15일 광주시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내 석면슬레이트 건물이 1000여 곳에 달하고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내년 1월 석면폐기물처리시설을 시흥을 앞두고 광주시 석면폐기물 관리부서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행 석면폐기물 처리허가가 규정된 폐기물관리법에는 석면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고형화 처리'와 '석면매립 처리' 등 2가지를 이행토록 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지난 8월 말 기준 석면폐기물 처리허가 274건 가운데 고형화처리는 고약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69건은 관리형 매립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석면폐기물을 아무런 조치 없이 땅에 매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처리비용과 처리방법 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칫 시민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보육시설 안전교육 불감증 위험"

### 이은방 시의원 주장

광주시 일선 보육시설 상당수가 불법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영하고 운전기사들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안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은방 의원은 15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보육시설 안전교육 불감증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보육시설 1184개소 중 699대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지만, 110개

소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고 운행하고 있고, 37명의 운전기사만이 건강진단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어린이 통학 버스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차량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 이를 줄이려는 보육시설들이 차량 신고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안전교육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과 동시에 행정처분 대상인데도 불법 운영 사례가 아직도 많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2 세계해양포럼'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 '2012 세계해양포럼'에서 빌리나 시신생(Biliana Cicin-Sain) 공동의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F1 감사 불성실때 예산 불이익"

### 도의회 압박수위 높여

전남도의회가 F1(포뮬러원) 대회 운영법인인 KAVO와 전남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 256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F1 대회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요구자료 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다, KAVO 정영주 대표 등의 출석 여부도 불투명해 변죽만 울리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전남도의회 장일 경계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도와 F1조직위에 요구한 F1 대회 관련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이 부실할 경우 내년도 예산 심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46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해놓

았지만 도의회 안팎에서 사무감사에 대해 '면죄부 감사', '착잔 속의 태풍' 등 감사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흘러나오는데 따른 사전포석이다. 즉 예산안 심의와 연계해 불성실하고 부실한 사무감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장 위원장은 또 "현재 전남도에 늦어도 목요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제출 자료들이 불성실할 경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여기에는 의원 뿐만 아니라 민간의 건설·회계 분야 전문가 등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청구, 수사의뢰 등 의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남도의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F1대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 ■탈북자 2만명 시대...의미와 과제

### "차별·편견 버리고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 99년 1000명...1만명 돌파 3년만에 2만명 돌파

#### 경제활동 참가 저조...자립 토대 마련 급선무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어느덧 2만명을 넘었다.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15일 귀순한 고(故) 김정수씨(1986년 61세 일기로 사망)를 시작으로 군사분계선과 해상을 통해 넘어온 귀순자와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통해 입국한 탈북자 수가 지난 주말 2만명을 돌파했다.

◇2007년 1만명 초과-3년만에 2만명 돌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생활 근거지가 있었던 자로 북한을 이탈한 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출생한 북한 주민의 자녀나 조손족, 화교 등은 제외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같은 탈북자 입국 인원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착지원법이 제정된 1997년, 876명에 불과했던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2006년부터는 연도별 입국 탈북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2008년 이후에는 3000명에 육박했다. 그 결과 1만명을 돌파한 지 3

년만에 2만명에 도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5일 "오늘날 전국 211개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사는 2만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이제 친근한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자립이 급선무= 탈북자들은 누구나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과 주택지원금, 주택알선,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대학 특례입학, 등록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사회교육을 받은 뒤 퇴소하면서 1인 세대 기준 월 42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는 등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된다.

이 같은 혜택은 5년간의 거주지보호 기간 주어지며 그 이후에는 일반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된다.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데는 지역적응시설인 하나센터(30개)와 탈북자 단체(30여개), 민간단체 연대(67개) 등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지원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

난 9월 정착지원법을 개정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을 설립했다.

탈북자들에게 이와 같은 정착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통일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해 작성한 '2009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착한 지 6개월이 넘는 15세 이상 탈북자의 경제활동참가율(48.6%)과 고용률(41.9%)은 각각 61.3%와 59.3%인 일반국민의 70~80% 수준에 그쳤다.

취업 탈북자의 경우에도 '식당'이나 공사현장 보조 같은 단순노동직'이나 '기계조작 및 조립'이 각각 31.5%와 23.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에 그쳤다.

지난달 경찰에 적발된 탈북 여성들의 일본 원정 성매매 사건은 어려운 탈북자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말해준다.

탈북자 출신인 안전일 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은 "탈북자들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 사회 통합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탈북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페루 FTA 가서명... 한국 8번째 체결

### 10년내 관세 모두 철폐...내년초 정식서명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장부장은 15일 오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8번째 FTA를 체결하게 됐으며 체결대상국도 45개국으로 늘었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지난 8월31일 타결한 한·페루 FTA에 대한 가서명식을 가졌다.

한·페루 FTA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페루로 수출되는 한국산 컬러 TV와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 후 즉시 철폐되며, 1500~3000cc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수출용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한 관세도 각각 4년, 10년 내에 철폐된다.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 측 민감 품

목인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은 FTA협정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으며, 그 외 202개 농·수산물도 협정 발효 10년후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에 대한 관세(2%)는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고, 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 등은 3~5년 내에 관세가 폐지된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첫 협상을 시작한 뒤 1년 8개월만에 가서명에 이르렀으며 이르면 내년 초 국문과 스페인어로 된 한·페루 FTA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땀뻑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m

**ACE**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 저하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안화, 야맹증
- 햇빛·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갱년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어지·목결림, 수직지림·수족냉증

이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광고심의필 : 1056-0600